

동전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00원, 500원 동전을 가장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통수단은 자판기이다. 자판기를 통해 제공되는 커피, 캔음료의 가격대가 1000원 이하이다 보니 동전사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액결제에 대명사인 자판기가 동전사용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역시 다양하다. 항시 자판기내 동전보관이 되어 있는 만큼 도난 파손의 문제가 작용하기도 하고, 화폐가치 차이가 있는 제3국 동전을 넣는다거나, 이물질을 넣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애써 모은 동전을 은행이 교환해 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무시를 받고, 또 한쪽에서는 한탕의 수단으로 혈안이 되게 만드는 게 자판기 동전이다.

인간사 다양한 이치처럼 자판기 동전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다양하다. 이번 정책초점에서는 자판기 동전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조명하고자 한다. 필리핀 동전 1페소가 국내 자판기에 유통되는 문제와 은행들의 교환거부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판기 동전 문제를 분석 정리했다.

필리핀 동전 1페소의 '자판기 습격'



액면가가 낮은 후진국 동전이 자동판매기에서 선진국의 비싼 동전으로 사용되는 '동전 월경'(銅錢越境) 현상이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필리핀의 1페소(한화 20원)

동전이 필리핀 근로자나 여행객을 통해 유입돼 자판기에서 실제보다 5배 가량 비싼 100원 동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매스컴에 의해 속속 보도되었다.

필리핀 1페소 동전은 100원 동전과 크기와 재질이 유사해 국내 자판기의 2단계 식별장치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100원 동전은 구리·

니켈 합금으로 지름 24mm, 무게 5.42g이며 테두리에 110개의 톱니가 있다. 1페소 동전도 구리(25%)와 니켈(75%)이 섞인 백동(白銅)이 재료로, 지름은 100원 동전과 같고 무게는 5.5g 내외로 다소 무겁다. 또 테두리에 100여개 안팎의 톱니도 있다.

자판기는 1단계로 전기를 동전에 통하게 하면 재질에 따라 전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 동전을 구별하는데 두 동전 모두 니켈·구리 합금이라 구별이 되지 않는다. 2단계로 광센서로 크기와 무게를 비교하는데 일부 자판기가 1페소와 100원 동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1페소 동전이 다량 유통된 곳은 부천 작전동 지역으로 알려 졌다. 문제가 되는 자판기들은 코인메카니즘 기능이 정도업 모드로 설정된 구기종자판기들이다. 정도업 모드의 코인메카니즘은 50%선의 1페소 입수율을 보인다고 한다.

최근 제품의 경우는 코인메카니즘의 기능을 normal 모드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1페소가 입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종합해 봤을 때 필드 보급된 전체 자판기의 30%선이 1페소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제품의 경우는 코인메카니즘의 기능을 normal 모드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1페소가 입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종합해 봤을 때 필드 보급된 전체 자판기의 30%선이 1페소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선은 적지 않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1페소 문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페소가 우리 돈으로 20원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5배의 차액을 노리고 범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 범죄에 악용될 만큼의 다량의 1페소가 유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문제가 다발하는 지역과 자판기의 경우는 코인메카니즘에 대한 A/S 및 B/S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정도업 모드의 세팅을 변경하면 1페소 입수문제가 해결이 된다.

외부적인 마스크의 관심과는 달리 자판기 산업계는 1페소 입수 문제를 그다지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면 되는 문제로 볼 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하지만 1페소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화폐가치가 낮은 제3세계의 많은 동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특히 화폐가치의 차이가 큰 제3세계 동전을 자판기가 인식할 경우 범죄가 확산될 확률이 무척 크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는 한국의 500원 동전이 500엔 동전으로 둔갑되는 일이 계속된 일이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기존 재질에 아연을 첨가한 새로운 500엔 동전을 만들기도 했다.

국내 유관 자판기 업체들도 타국 동전의 국내 자판기 인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한다. 코인메카니즘의 위폐배재율을 더욱 향상시켜 타국 동전들의 입수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판기 동전, 은행 교환 기피로 애물단지 전략

은행에서 동전교환을 꺼려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동전을 많이 발생시키는 자판기 운영업의 특성상, 동전교환 문제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사안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 6월 초 마스크와 여론의 집중 성토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는 해태음료 관계자가 지난 6월 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한민국에서 동전은 더 이상 통화가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촉발이 되었다.

그는 "자동판매기 회사에서 동전이 가마니에 담겨 들어 온다"면서 "이를 유통시킬 방법이 없어 창고에 쌓아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전을 일일이 셀 수 없어 가마니 무게를 저울로 재는 방법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소문해 할인 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교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어디에도 동전을 받아줄 은행이 없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분명히 회사에 현금이 있는데 막상 쓸 돈은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다수의 운영업체의 현실을 대변한 이 글은 놀랄만한 파장을 일으켰다. 동전교환을 거부하는 은행, 이 문제에 수수방관한 한국은행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한은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고, 각 마스크들의 열띤 취재보도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비판했다.

동전 교환을 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하는 안은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안은 은행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동전교환에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또 은행들이 동전교환에 대한 거부를 계속하는 현실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동전교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강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이 동전교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은행창구직원이 크게 줄어 동전을 분류, 계수하기 힘들다는 예로점에서 이다. 자판기 운영업체가 은행 거래업체인 경우, 마지 못해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동전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은행의 동전교환을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외처럼 일정수량 동전을 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동전을 많이

동전교환문제가 불어지자 한국은행은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 진화에 나섰다. 자판기, 시내버스처럼 동전수입이 많은 업종과 대형할인점처럼 동전이 많이 필요한 업종끼리 자발적으로 동전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2001년 6월 5일부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주화수급센터를 개설해 550여 수요처와 300개 공급처를 연결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동전교환을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 및 협조요청을 진행, 동전교환의 애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은행의 주화수급 원활화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아니라 현재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책으로 성격이 짙다. 한국은행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동전교환을 꺼리고 있어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우선인 은행에서 공익적인 동전교환 문제에 대해 일부 비난은 있을망정, 적극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실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면 동전교환 문제는 끊임없는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거하는 자판기 업체나 버스업체들 대다수는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보인다. 또 국민정서와 여론도 동전교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

종합해 볼 때 동전 교환을 하는 데 수수료 부과하는 안은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안은 은행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동전교환에 적극 협력하는 일이다. 또 은행들이 동전교환에 대한 거부를 계속하는 현실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동전교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강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동전교환 문제에 대해 산업계도 자율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계 자체적으로 동전의 공동 수거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전자화폐를 활성화시켜 동전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주화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의 동전 교환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닌 원활한 동전 교환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비책이 강구되길 기대해 본다.